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료
외주화**

2023/ 8/ 2 통권 163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워렌 버핏 “미국인, 낭비마을 사람들”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CF0·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있음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금융지원 실시
-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중부세 부담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와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등 일부 개정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보유한 보세구역 내의 저장 시설을 임차한 경우 당해 저장시설은 사업장에 해당 안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최고경영자·창업자·임원의 근속기간별 퇴직급여 계산방법〉

1. 퇴직소득범위 : 퇴직연금일시금, 현실적 퇴직원인 지급소득 등(소득세법 제22조)
2. 임원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계산방법(①+②+③,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① 2011년 말까지 인정금액(= 201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가정한 종전의 퇴직금 : 2011년의 연평균연봉 \times 10% \times 근속기간 \times 임원퇴직급여에 규정된 배수)
 - ② 2019년 말까지 인정금액(= 2019년 기준 소급 3년 총급여의 연평균액 \times 10% \times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8년 \times 3배수)
 - ③ 2020년부터 인정금액(= 실제 퇴직한 날부터 소급 3년 총급여의 연평균액 \times 10% \times 근속기간 \times 2배수)
3. 총지급액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근로소득분류금액(근로소득연말정산에 합산) = 퇴직관련 총지급액 - (①+②+③)
4. 퇴직금계산사례
 [2001년 창업(창업자 퇴직가산을 5배수), 2011년 연봉 5천만원, 2019년 3년 평균 연봉 1억, 30년 근속 후 예상퇴직 2030년의 소급 3년간의 평균연봉 추정액 2억원인 경우]
 퇴직금인정액 = ① 전액인정 : 5천만원 \times 10% \times 11년 \times 5배수 + ② 3배수 인정 : 1억원 \times 10% \times 8년 \times 3배수 + ③ 2배수 인정 : 2억원 \times 10% \times 11년 \times 2배수 = 275,000,000 + 240,000,000 + 440,000,000 = 955,000,000원
 총지급액 : 10억원이면 - 955,000,000 = 45,000,000원은 퇴직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연말정산함

(안세희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34호 / 주간 31호

2023. 8. 2.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최고경영자·창업자·임원의 근속기간별 퇴직급여 계산방법	표지
C E O 에 세 이	워렌 버핏 “미국인, 낭비마를 사람들”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유형자산 문의 - 임원 개인 차량 사용 - 매출취소 문의 -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4
눈에맞는 절세미인	12월말 결산법인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있음	5
매일 절세재무요점	- 종합과세 비용처리 시 단순·기준경비율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표	6
직장인 Survival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③	8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속세및증여세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사전법규재산-848, 2023.01.26)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재산세제과-1005, 2022.08.19)	11
세정뉴스와 해설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무조사 연기 · 납부기한 연장	12
마케팅 Tax consulting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보유한 보세구역 내의 저장시설을 임차한 경우 당해 저장시설은 사업장에 해당안됨	13
세무정보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금융지원 실시 -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중부세 부담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
회계정보	-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 일부 개정	22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23
		36
		45
		3

워렌 버핏 “미국인, 낭비마을 사람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부자가 되는 길, 부도(富道) 1단은 근(勤), 2단은 검(儉)이다. 부도 3단은 축(蓄)이다. 쌓는 일이 중요하다. 우선 쓰지 않고 지키고 불려야 한다.

조선 중기 ‘어우야담’에 나오는 충주의 고비이야기다. 자린고비로 불리는 이가 바로 그다. 동네 사람 하나가 부자되는 비결을 알려 달라 그에게 간곡히 청했다.

고비는 흔쾌히 응했다. 그들은 성 위쪽에서 만나기로 했다. 산위에서 자란 소나무 한 가지가 성 밖으로 뻗어 있었고 그 아래는 절벽이었다. 고비는 동네사람에게 그 가지에 매달리라고 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그 말대로 했다.

“이제 한 손을 놓으시오”

“예?”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고비의 말대로 따라 하기는 했다. 그러나 떨어지면 곧바로 저승행일 듯하여 바짝바짝 목이 탔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쪽 팔에 온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쥐고 있었다. 드디어 고비가 한마디 했다.

“그 한 손으로 소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당신 재물을 잡고 있으면 되오.”

재물을 지켜야 한다는 비결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케 해주었던 것이다.

한국인들은 빚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오래전 대기업들이 달러를 들여와서 돈장사하며 흥청했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또 신용카드 사태로 온 국민이 카드대출로 돈을 헤프게 쓰더니 이젠 영끌이라며 빚내서 코인, 주식, 집을 사는 게 유행이 됐다.

강대국 미국도 쌍둥이 적자로 허덕인다. 세계적 부자인 워렌 버핏조차 미국인을 ‘낭비마을 사람들’이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경제거품을 품은 채 중국의 경제도 심상찮다. 전쟁으로 유가와 원자재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폭등하고 있다. 세상이 어수선하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나 개인이나 돈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부도 4단은 업(業)이다. 최고의 투자는 창업이다.

‘기업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이 되면 신세가 한층 좋아진다. S그룹의 경우다. 신임상무가 되면 부장 때보다 연봉 2배를 비롯하여 50가지가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임원이 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유지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업(業)을 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닌가. 중국의 원저우(溫州)사람들은 ‘중국의 유태인’이자 ‘중국의 개성상인’들이다. “배부른 종업원보다는 배고픈 주인이 낫다”는 게 그들의 뱃속 깊이 새겨진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남의 회사에 들어가 높은 지위에서 일하는 것보다 노점상일지라도 주인이 되는 쪽을 택한다. 주인이 되었을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 남부에 산을 등지고 바다를 마주한 지리적 환경이 원저우인들에게 개방과 모험의 정신을 갖게 했다.” 전 중국국가 주석 장쩌민의 찬탄이다. 결코 지칠 줄 모르는 삶의 태도와 실리를 추구하는 그들의 성취력은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최대나 최고가 아닌 시장의 최적주의’를 내세우며 무서운 속도로 세계의 상권을 석권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원저우의 실천적 모험가들에게 감사해야한다.” 거인 덩샤오핑은 아낌없이 그들을 칭송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21일 (금)	7월 24일 (월)	7월 25일 (화)	7월 26일 (수)
미	달	러	(USD)	1265.80	1281.70	1283.80	1280.70
일	본	엔	(JPY)	904.37	904.61	907.12	908.78
영	국	파	운 드	(GBP)	1629.40	1647.50	1645.45
캐	나	다	달 러	(CAD)	960.80	969.33	974.68
홍	콩	달	러	(HKD)	162.00	163.95	164.31
중	국	원	(CNH)	175.97	178.55	178.30	178.87
유	로	화	(EUR)	1409.66	1426.40	1420.14	1415.37
호	주	달	러	(AUD)	857.90	862.07	864.83
싱	가	폴	달 러	(SGD)	953.95	963.18	963.7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8.63	280.98	280.77

유형자산 문의

Q 내용연수 4년으로,
17년 9월 취득 자산을 정률법으로 관리하다가 21년1월1일부터 정액법으로 변경하면, 21년1월부터 정액법 감가상각 4년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21년9월(17년기준 4년)에 상각이 끝나야 맞는건가요?

A 감가상각방법변경시 잔존내용연수는 기존내용연수 48월에서 경과내용연수 차감한 나머지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되므로, 21년 9월에 상각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임원 개인 차량 사용

Q 임원용 법인 차량이 아직 출고되지 않아, 입고 이전까지(입사일~법인차량 입고일) 임원의 개인 차량(개인용 보험 가입)을 사용하고 회사에서 임원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비용 처리 방법과 업무용차량으로 비용 인정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류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6【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매출취소 문의

Q 당사는 A사로 매출했던 아이템을 20년 11월, 21년 5월에 돌려받았고, 당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금은 받지않고 미수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매출 취소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데, 22년 1월에 매출 취소 및 부가세 수정신고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질의가 명확하지 않는데, 수출물품의 하자 등으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차감하여 신고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2020년2기확정, 2021년1기확정시기에 반입되었으므로 해당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기간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3팀-586, 2005.05.02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63, 2003.12.6. ; 부가22601-1604, 1990.12.6. ; 부가22601-243, 1990.2.28.)을 참고하기 바람.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Q 당사는 면세법인입니다 (출판사) 상대방은 일반법인입니다.

저희는 항상 책을 판매해와서 면세계산서만 발행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저희 책을 인용하여 받는 비를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도 문제없는 건가요?

A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를 따르도록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면세사업관련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가 아닌 면세로 하여 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있음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은 1년의 사업연도동안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이다.

따라서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계산하여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나, 다음에 열거된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①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②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③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⑥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⑦ 조특법 §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⑧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① 직전연도 납부세액기준(흑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다시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사업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 ⊕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times \frac{6}{\text{직전사업연도월수}} \ominus \begin{matrix} \text{고용창출} \\ \text{투자세액공제액} \\ \text{(당해 연도)} \end{matrix}$

② 전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적자법인)

전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가결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시 신고납부한다.

중간예납기간(당해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세율 : 2억 이하(9%), 2억 초과~200억 이하(19%), 200억 초과(21%) 	$\times \frac{12}{6} \times \text{세율} \times \frac{6}{12}$	$\ominus \begin{matrix} \bullet \text{공제} \cdot \text{감면세액} \\ \bullet \text{원천납부세액} \\ \bullet \text{수시부과세액} \end{matrix}$	

③ 예외의 경우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3.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중간예납 미납에 따른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소납부세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이때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1일당 0.022%를 곱하여 계산한다(가산세 계산산식 = 미납부세액 × 1일 0.022%).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종합과세 비용처리 시 단순 · 기준경비율 (※2022년 기준)

구분	경비율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신규사업자 (당해년도)
	일반주택	고가주택		
단순경비율	42.6%	37.4%	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17.2%	15.2%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표

구분 (배우자 주택 합산)	월세	전세(보증금)
1주택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표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		국민인 개인	(나이)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
			(무주택)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차이점		나이/소득/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관련 없이 가입가능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혜택	금리	연 1.3% ~ 2.1%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최고금리 연 3.6% - 기본이율(연 0 ~ 2.1%) - 우대이율(연 1.5%)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비과세	없음 (이자소득세 + 주민세 15.4%)	이자소득 500만원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공통 조건		1인 1계좌만 가능 조건 충족시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신규 가능 (동일은행 내)	
취급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③

8. 직원 동기 부여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개인을 유인하는 것은 팀장이 가져야 할 또 다른 자질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직원들이 열정과 야망을 떨쳐버릴 때 기운을 북돋우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직원을 자극하기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낮은 일을 반복하는 데 어려움과 피로로 인해 직원들은 열정을 잃습니다. 이러한 경우 리더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9. 일에 대한 열정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룹 구성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리더십 기술과 다른 팀 구성원의 기여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활력을 가져야 하며 그들의 제안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10. 훈련하기

규율을 지키는 것은 당신을 훌륭한 리더로 만드는 필수 자질입니다. 당신이 좋은 생각과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규율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규율은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벽한 품질입니다. 자기 훈련을 하고 팀의 다른 사람들이 훈련을 받도록 교육하여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최신 판례예규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속세및증여세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사전법규재산-848, 2023.01.26

■ 질 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 61①(3)의 적용대상인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을 상속한 경우로서,
 - 상속받은 전유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 61①(3)에 따른 고시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 받은 전유부분의 보충적 평가방법

■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8-상속증여-2731, 2019.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상속증여-2731, 2019.01.2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4팀-1493, 2007.5.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493, 2007.5.4.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고시가액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보유한 보세구역 내의 저장시설을 임차한 경우
당해 저장시설은 사업장에 해당안됨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부가-1131, 2023.01.13

■ 질 의

-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외국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저장된 원유를 외국법인의 국내 손자회사(법인)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용역 등을 제공받으면서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저장된 원유를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이하 "B법인")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제공 받으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원유저장시설은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위해 사용되며,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재산세제과-1005, 2022.08.19

Ⅰ 질 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 41의3 적용여부

Ⅰ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87⑦(1)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

사전법규소득-1077, 2023.01.26

Ⅰ 질 의

- 질의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87②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자로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위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아 오던 중 이를 해지함

질의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후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87⑦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

Ⅰ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이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주택청약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후 위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던 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7조제7항제1호본문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무조사 연기,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9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25일이 신고 기한인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 밖에 고지받은 세금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채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매각 보류 등 채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직접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최장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은 우편 및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재해재난 시 납부연장 최장 9개월까지... 내달 4일 조기환급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이 바짝 다가왔다.

국세청은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등 최장 1년 압류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

원을 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또는 방문 없이도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수출·혁신 중소기업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을 5일 앞당겨 내달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법정지급기한 보다 열흘 앞당긴 내달 14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세법개정, '청년결혼자금 1.5억 공제' 등... 올해도 기업 감세 주력

정부가 기업 감세를 기조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대상에 영상 콘텐츠 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영상 콘텐츠 대기업은 3%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5배 올려 15% 공제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일가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등이 유력시 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돈 가치는 하락하는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나라가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저율과세한도 확대는 더 많은 기업주 일가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상위 10% 결혼 자녀 공제로 불리는 1억5000만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추진 중이다.

가족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만, 여기에 결혼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가 부모님을 합칠 경우 3억원 공제에 달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올해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됐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나뉜 부동산 투기 제도 완화와 맞물려 있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금융지원 실시

— 국세청·금융감독원, 2023. 7

국세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가능
-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참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파,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참고 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4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금융감독원

정부는 7.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별첨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1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 ①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 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 국민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예시) >

- 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 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 농협은행 :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국민은행 :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p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

< 카드사(예시) >

- 소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 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 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 상호금융업권(예시) >

-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 생보·손보업권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손보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제공

2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 ①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은·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100%, 보증한도 5억원)
-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 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최대 5억원) 지원 등

②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③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대출받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3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7.17.)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각 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입니다.
-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 유의 사항

- ①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②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③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중부세 부담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2023. 7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중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중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6일(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중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중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주택 수 제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기본 누진세율 특례)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종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구체적 개정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① 공공임대주택, ②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둘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중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넷째,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8.16일) 후 국무회의(8.29일, 예정) 등을 거쳐 확정되며, 금년도 중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 금융감독원, 2023. 7

정부가 지난 6.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 정무위 법안소위(4.25.)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 마련 후 보완하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추진 합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6.30.)

7.1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 (감독지침 초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법상 필수 사전절차(회계기준원 내 설치)

※ 본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가상자산 자체가 지닌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만큼 가상자산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 매개체인 토큰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법률 측면에서는 회계적 판단시에 경제적 측면 외에도 법률적 소유권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지위가 그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국제동향 측면에서도 독자적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미국과 일본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놓거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계처리 지침을 공표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 IASB는 향후 5개년('22~'26년) 업무계획 수립시 '가상자산 거래'를 제외('22.4월)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속도가 가상자산 관련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6.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 주요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전문가들은 '22년에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관련 회계쟁점을 파악·논의하고, '23년에는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이 회계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아울러,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및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22.12월)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꾸준히 수렴해 왔다.

[주요 내용]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크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❶ 회계처리 감독지침

※ 본 감독지침과 기준서상 가상자산 적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준용하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토큰증권을 포함

지난 '22.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現 회계기준이 빠르게 발전하는 新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新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이러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2.9월 「계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안내한 것에 이어, 그 두 번째에 해당한다.

※ 감독지침은 회계분야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니고, 현재 적용중인 IFRS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 처리방향을 시장에 안내 (그간 총 8차례 공표)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주체와 거래단계별로 회계처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 발행자 >

첫째, 이제까지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인식시기를 결정하는데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이 발행주체마다 달랐고, 회사와 감사인이 이견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며,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한다.

* 가령 1)가상자산을 이전만 하면 되거나, 2)플랫폼까지 구현해야하거나, 3)구현된 플랫폼 내에서 발행자가 재화·용역을 이전해야하는 등 다양한 수준·단계의 의무가 존재
→ 가상자산의 이용가치는 플랫폼 활성화,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좌우되는 만큼 백서상 발행회사에게 이에 대한 추가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

둘째,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만약 회계기준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후 본질적 가치의 손상 여부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발행 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개발된 가상자산이 향후 시장에서 거래되어 가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지 등 총 6가지 요건

< 가상자산 보유자 >

셋째, 그간 IFRS 해석위원회('19.6월)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해서 판매목적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만을 제시함에 따라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 분류가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왔다. ☞ 앞으로는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상자산 사업자 >

넷째, 그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하여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시에 고려토록 한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이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국제동향

- ① (미국) 사업자의 보호의무 및 법적 모호성에 따른 유의적 위험 고려
→ SEC는 위탁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및 자산)로 인식토록 지침 발표('22.3월)
- ② (일본) 암호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 개정('16년)
→ 사업자가 자산·부채로 인식토록 회계처리기준 제정
- ③ (유럽) 유럽재무보고자문위원회(EFRAG)은 암호자산 회계기준 토론회('20.7월) 발표시 고객 위탁 암호자산의 경제적 통제 판단지표 제시(☞보호방법 등 수준 포함)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단순히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충실히 제공하여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절차 수행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 (예) ❶ 활성시장의 요건: 지속·충분한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면서(양적 평가), 신뢰성이 높고 법
정화폐로 교환가능(질적 평가)해야 함
- ❷ 공정가치: "접근가능"한 "주된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기준을 각 용어별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지어 구체화

❷ 주식공시 의무화 [기준서 개정]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식공시가 의무화 된다.

< 가상자산 발행자 >

첫째,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White-paper)에 공시되어 있으나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해당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는 정보임에도 이를 주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보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 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준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하였다.

< 가상자산 보유자 >

둘째,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 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토록 하여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 가상자산 사업자 >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 간 회계기준 미비로 인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 ☞ 앞으로는 자산 · 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 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토록 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인 가상자산을 보유 · 개발 · 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 · 배포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방안은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가상자산 자체가 가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만큼 투자시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추진 일정]

본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약 2개월간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 · 의결 등을 거쳐 공표 · 시행할 계획이다.

* 설명회 과정에서 지난 7일 의결된 공개초안에 따라 강화되는 주석공시 사항에 대한

"모범사례"도 같이 발표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증선위의 자문기구

한편,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개정된 기준서(주석공시 의무화)는 '24.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적용이 가능하며,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

* 빠르면 '24년 분 · 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표시되는 '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 확인 가능



※ 주요 용어 해설

- (가상자산)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개정 공개초안(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6

- ☞ 이 외에도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코인과 토큰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는지 여부(코인 O, 토큰 X)에 따라 구별되나, 실무상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의상 '토큰'으로 통일하여 사용

< 주요 유형 >

- 1)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특정 플랫폼, 재화나 용역에 접근하거나 이용가능한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
- 2)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 송금, 가치이전 목적으로 사용(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Claim)할 수 없음)
- 3)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토큰 증권")

* 분류방식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블록체인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거래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서버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분산 컴퓨터("노드")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
- (플랫폼) 사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특정 토큰을 사용함
- (백서)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기획서로, 대중들에게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가치를 제안하고, 개발 로드맵, 마일스톤 등을 설명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주요 내용

※ 본 지침(안)은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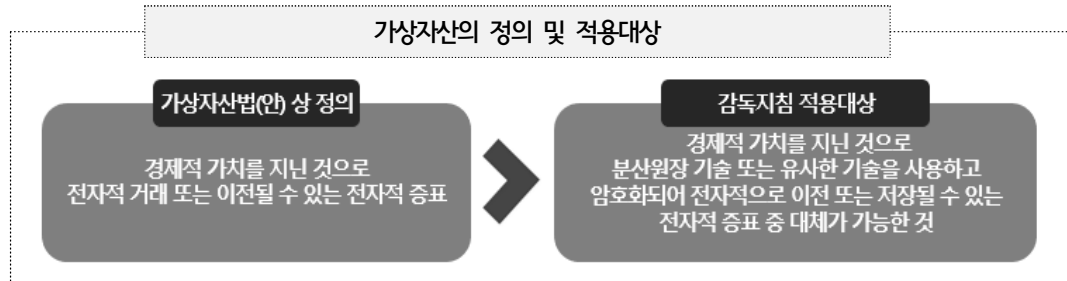
1 감독지침의 성격 및 적용대상

- (성격)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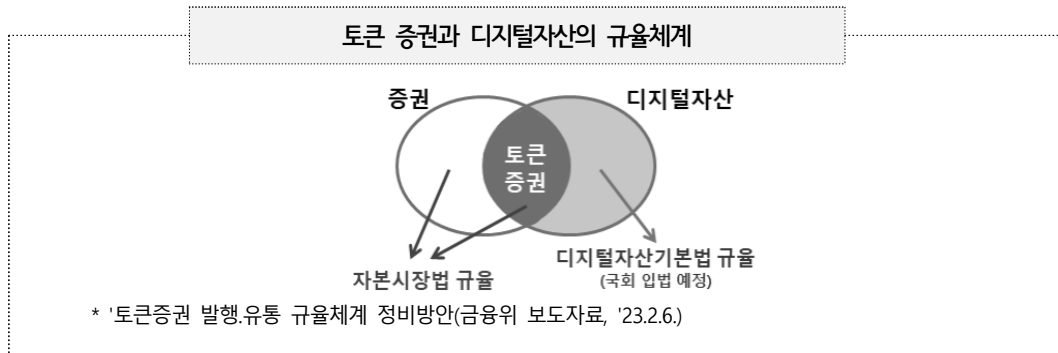
□ (적용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이하, "가상자산" 또는 "토큰")

- ①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 ② 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해 보안
- ③ 대체가 가능(Fungible)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도 감독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금융위, '23.2.6)의 토큰 증권과 동일



2 감독지침(안)의 주요 내용

1. 토큰 발행 기업의 회계처리

- (현행) 발행자가 토큰의 개발부터 발행까지 발생하는 여러 사건 및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
- (개발) 토큰 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의 자산화 여부
 - (발행) 다양한 경제적 사건*에 따라 발행하는 토큰의 회계처리 및 토큰과 직접 관련된 원가가 발생할 경우 자산화 여부
- * 사전판매, 무상배포, 용역대가, 개발 팀원에게 제공 등



- (유보) 개발완료되어 발행 후 유보된(Reserve) 토큰의 자산성 여부
- ➡ (개선) 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발생원가 및 내부유보 토큰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검토
- * 가상자산의 이용가치는 플랫폼 활성화,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좌우 → 백서상 발행회사에게 이에 대한 추가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

(1) 개발

- (개발원가) 플랫폼 및 토큰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개발활동이 K-IFRS 제1038호 상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비용으로 회계처리
- * 개발활동 :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2) 발행

- (직접 관련원가) 발행자 스스로 발행한 토큰이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와 직접 관련된 원가 또한 비용으로 회계처리
- * ①토큰이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나타내며 ②이 토큰을 기업이 통제해야 함
- 유틸리티 토큰은 미래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효익을 창출*하므로, 토큰만 개발된 '현재'시점에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어려움
- * 발행한 토큰에서 약속한 의무(재화나 서비스 제공)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
- (판매) 토큰 판매 시 대가를 미리 수령하였더라도 발행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식별된 관련 의무를 반드시 모두 이행한 후 수익을 인식

* 가령 1)가상자산을 이전만 하면 되거나, 2)플랫폼까지 구현해야하거나, 3)구현된 플랫폼 내에서 발행자가 재화·용역을 이전하겠다는 다양한 수준·단계의 의무가 존재
→ 가상자산의 이용가치는 플랫폼 활성화,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좌우되는만큼 백서상 발행회사에게 이에 대한 추가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

- 백서 또는 다른 약정 상 약속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토큰 발행 시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식별해야 함
- 발행시점에 수행의무를 충분·명확히 식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약변경에 의한 수행의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백서의 변경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변경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오류로 간주

- 명확한 증거가 없이 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부채로 인식한 이전대가를 수익 인식하기 매우 어려움

- (판매 이외) 판매 이외에 토큰을 유통*시킨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의무를 이행한 이후 거래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 무상배포(Air drop), 용역대가, 개발 팀원에게 제공 등

(3) 발행 후 내부 유보(reserve)

- 발행 후 내부유보 토큰은 직접 관련원가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 내부유보 토큰의 유보현황 및 기중 사용내역을 주석 공시 의무화(별첨1 참조)

(4) 토큰증권

- 발행한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해당 기준서를 적용

- 기업이 발행한 토큰 증권은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고려, 부채인지 자본인지 결정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금융부채 분류가능성이 큼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②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토큰 보유 기업의 회계처리

- (현행) IFRS 해석위원회 논의 대상 토큰* 이외에 다른 토큰을 보유한 경우의 회계처리가 불분명

*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본다는 IFRS 해석위원회 논의('19.6월)는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간 계약을 생기게 하지 않는 지불형 토큰을 대상으로 하였음

- ➡ (개선) 토큰 분류 별 취득 목적에 따른 적용 기준을 안내하고, 이에 따른 최초 인식, 후속 측정 및 손상 평가,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화

< 토큰의 종류별 회계처리 개요 >

토큰 등의 분류	토큰 취득목적	계정 분류	적용 기준서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재고자산	제1002호 '재고자산'
	판매 목적 외	무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
토큰 증권	투자 목적	금융상품	제1109호 '금융상품'

**(1) 최초 측정**

☐ 취득 방식과 경로를 고려하여 토큰의 최초 취득원가를 결정

① (유상취득) 구입가격에 취득을 위해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

② (플랫폼 운영, 채굴) 운영 또는 채굴 비용 중 토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토큰 취득 금액으로 인식

③ (용역 제공대가) 토큰의 시세를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할 경우 토큰의 시세로, 추정이 어려운 경우 제공한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참고하여 측정

④ (무상수령) 취득원가를 영(0)으로 인식

* 가치 변동성 및 경제적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

⑤ (토큰증권)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2) 후속측정 및 손상평가

☐ 취득한 토큰의 분류에 따른 적용 기준에 따라 후속 측정

①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실현가능가치 - 매각부대비용)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 예외적으로, 중개기업(사업자 등)이 토큰을 취득한 경우에는 ❶국제 상품 거래소에서 일반상품(Commodity)으로 취급되고 ❷단기간에 처분이 가능한 경우 순공정가치(공정가치 - 매각부대비용)로 측정

② (무형자산) 같은 유형의 토큰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선택 가능

- 재평가모형 적용 시 원가보다 상승 변동 분은 기타포괄손익, 원가보다 하락 변동 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③ (금융자산)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후속 측정

(3) 처분

☐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익은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영업손익, 그 외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 다만, 판매 목적 외로 취득했다라도 정관, 사업목적, 금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손익으로 분류할지 고려

< 토큰의 종류별 영업손익 표시 사례 >

토큰 등의 분류	토큰 취득목적	계정 분류	재무제표상 손익 표시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재고자산	영업손익(매출 등)
	판매 목적 외	무형자산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
토큰 증권	투자 목적	금융상품	"

3.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가 고객 위탁 토큰 및 자기 소유 토큰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불분명
- * 가상자산 사업자의 주된 업무 : ①가상자산 매매거래 중개와 ②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전자지갑 서비스 등
- ➡ (개선) 고객 위탁 토큰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재무제표 인식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주식 공시 의무화를 안내하고 자기 소유 토큰의 보유 목적 및 영업 행태에 따른 회계처리를 명확화

(1) 고객 위탁 토큰의 회계처리

- 위탁 토큰에 대한 고객과 사업자 중 경제적 통제*를 누가 하는지 판단하여 사업자의 관련 자산·부채의 인식 여부를 결정
- *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 경제적 통제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하나의 지표가 경제적 통제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것은 아님
- ①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 ②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 ③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 사업자는 위탁 토큰 관련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별첨1 참조)
- * 1)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시장가치 정보 및 산정에 사용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
2) 해킹 등 유의적 위험, 불확실성 및 위험관리활동에 대한 내역

(2) 자기 소유 토큰의 회계처리

- 토큰 보유 목적(사업 목적) 및 영업 행태에 맞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 ① (일반)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매도·중개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
 -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후속적으로 회계처리
- ② (매도·중개 목적) 중개기업인 사업자가 일반상품(Commodity)인 토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
 - 순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고 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 인식
- ③ (영업에 사용) 통상적인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인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
 -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로 후속 측정



(3) 사업자의 토큰 처분 시 회계처리

□ 「토큰 보유기업」의 토큰 처분 시 안내사항을 참조 (☞ 3.(3))

4.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 (현행) 가상자산은 그 분류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나, 상황별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불분명

< 토큰의 분류에 따른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상황 >

분류	상황	참조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적용(공정가치 측정)	4.(1)
	원가모형 적용 시 손상의 회수가능액 산정(순공정가치 측정)	4.(2)
중개기업이 보유한 일반상품인 재고자산	순공정가치로 측정(공정가치-매각부대원가)	
사업결합	취득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토큰 증권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 (개선) 가상자산의 분류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측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화

(1) 무형자산_재평가모형

□ (일반) ❶활성시장*이 있을 경우에만 ❷활성시장을 기초로 공정가치로 측정 가능

*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

❶ (활성시장) 활성시장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 거래소에 상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활성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

❷ (활성시장 기초) '유사한(동질적인, homogeneous)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 해당 가격을 공정가치 투입변수로 사용 가능

* 같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성되고, 유사한 토큰 간 정상적인 거래 규모와 빈도가 충분하여 신뢰성 있는 교환비율 존재하는 경우

□ (공정가치) 측정일 현재 ❶접근 가능한 ❷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는 ❸시장참여자 사이의 ❹정상거래로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

❶ (접근 가능) 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거래 가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격을 투입변수로 공정가치 측정 불가

* 다양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사이트상의 가격은 일종의 평균개념이므로 그 가격 그대로 거래할 수 없다면, 접근 가능한 가격이 아님

❷ (시장) 접근가능한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공시가격 사용

*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빈도가 가장 잦은 시장

**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받는 금액을 최대화(거래원가와 운송원가를 고려)하는 시장

- ㉓ (시장 참여자)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자진 거래 등으로 형성된 공시 가격은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될 수 없음
- ㉔ (정상거래)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격은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 i) 측정일 전 일정기간동안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를 위한 충분한 시장 노출이 없었음
- ii) 매도자가 하나의 시장참여자에게 가상자산 마케팅활동을 수행
- iii) 매도자가 파산이나 법정관리 상태에 있음(재무적 어려움)
- iv) 매도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매도할 것을 요구받음(매도가 강제)
- v) 거래가격이 같거나 유사한 가상자산의 최근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거래가격이 예외적임

- (측정) 동일·유사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공시가격 존재 여부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상이*

* 동일한 또는 유사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모두 없다면 무형자산을 원가로 측정

- (동일한 가상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 존재시) 측정일에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공정가치 투입변수로 사용
 - 다만, 활성시장이 존재하나, 기업이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과는 다르다면 전송원가(운송원가)를 투입변수로 고려
- (유사한 가상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 존재시) 동일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없고, 유사한(동질적인) 가상자산의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한다면 이를 조정하여 공정가치 투입변수로 사용
 - 유사한 가상자산과의 신뢰성 있는 교환비율을 고려하고 전송원가 등을 투입변수로 하여 측정

(2) 무형자산 이외

- (측정)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가치평가기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수익접근법 등 사용
 - (시장접근법) 유사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그 밖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사용
 - (원가접근법) 가상자산을 대체할 때 현재 필요한 금액(현행대체원가)에 진부화를 반영
 - (수익접근법) 미래 금액(현금흐름, 수익, 비용)의 현재 할인된 금액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금융감독원, 2023. 7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18.11월) 하였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
또한, 동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2월)하여 운영하여 왔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감사/감사팀)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7건 → ('22년) 15건, 총 44건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개정내용]

우선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는 회계부정의 정의를 감사기준을 참고하여 명확화 하였다.

현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 포함하였다. 더불어,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하였다.

*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외감규정§27⑦4)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하였다. 특히, 외부전문가의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조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가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예시) ❶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❷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❸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또한,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예시)을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현행 가이드라인상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에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조사기간 등을 추가하고, 증선위에 제출할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하였다.

※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내부조사를 요청한 시기, 경영진의 조사결과 및 자진시정 결과 제출시기 등을 추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참고 1 -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1 (감사인 → 내부감사기구) 회계부정 통보대상 정비

- ☐ (회계부정 의미 명확화) 회계부정 의미를 명확화하여 회사 및 경영진 뿐 아니라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대상에 포함
- ☐ (절대금액 통보기준 반영) 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대상에 최소한의 절대금액 통보기준(50억원 이상)도 반영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현 행	개정 가이드라인
<p>①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p> <p>②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p> <p>*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p>	<p>①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u>경영진(「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u>, 지배기구, 종업원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p> <p>②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p> <p>*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 <u>다만,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u></p>

2

(내부감사기구)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사항 신설

- ☐ (고려사항) 회계부정 조사업무가 적절하고 충분히 진행되도록 내부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사항으로 전문성 및 독립성 요건을 마련하고,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안내
- ☐ (외부전문가 범위) 회계부정 조사관련 외부전문가 예시로 기존 법무법인/회계법인 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도 추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현 행	개정 가이드라인
<신 설>	<p>③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 조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회계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부정 조사결과에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요건, 예를 들어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이란 외부전문가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충분히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 독립성이란 조사결과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가 선임이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외부전문가가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예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중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인 경우 ③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div>

3 (결과보고) 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정비 등

- (조사결과 포함사항 정비) ❶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내역, ❷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조사기간 등을 추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현 행	개정 가이드라인
<p>❷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p> <p><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p> <p>❶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p> <p>❷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 판단</p> <p>❸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p> <p>❹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p> <p>❺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p>	<p>❷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p> <p><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p> <p>❶ 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시기 및 통보내용</p> <p>❷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기간</p> <p>❸ ~ ❺ < 현행 ❶ ~ ❺와 같음 ></p>

- (조사결과 제출양식)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양식(예시)을 추가 (☞ <별첨1·2> 참조)

참고 2 -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전문 (개정 후)

* : 개정사항은 노란색 음영 표시

가. (감사인 → 내부감사기구) 회계부정의 통보대상(구체화) 및 범위

- ❶ (통보대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❶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❷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❶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경영진(「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 지배기구, 종업원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 ②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시 해당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통보범위)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나.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 ① 내부감사기구는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경영진은 내부조사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예시) >

- ①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 ②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 ③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 ④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 ⑤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 ⑥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③ 내부감사기구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부정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요

건, 예를 들어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이란 외부전문가가 회계부정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충분히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 독립성이란 조사결과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 선임이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가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예시) >

- ❶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❷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중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이었던 경우
- ❸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다. 회계부정 조사 협의, 시정조치 및 문서화

- ①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며, 조사의 모든 단계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합니다.
 -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사전협 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회사 대표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22③, ⑤)
 -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과 충분 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한 외부전문가의 조사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서상 감사절차를 수행함(감사기준서 500)
 -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 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 ②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신위와 감사인에게 제 출해야 합니다. (☞ <별첨>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양식(예시))
 - 회사에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 충분성 등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

- ❶ 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시기 및 통보내용
- ❷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기간
- ❸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 ❹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 ❺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 ❻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 ❼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라. 감사인 필요 조치

- ☐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사 의견의 변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예시) >

- ❶ 회계부정 또는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적격성 있는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여부
- ❷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시에 시정되었는지 여부
- ❸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❹ 재발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통제나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별첨 1 -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 양식 (예시) (경영진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합니다.
2. 본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감사인인 xx회계법인으로부터 20xx년 x월 xx일 당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이에 본 감사(위원회) 당사가 회계부정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본건의 경우 경영진에 의한 내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xx년 x월 xx일 경영진에게 내부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내용 기재 (예시) >

- 1) 회계부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래내역 및 관련 계정과목
- 2) 감사인이 회계부정을 인지하게 된 경위 (감사과정에서 확인,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
- 3)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평가내용

3. 상기 경영진의 조사결과 및 자진시정 결과는 20xx년 x월 xx일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되었으며, 본 감사(위원회)의 검토 결과, 관련 조사 및 조치는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 요약 기재 (예시) >

- 1)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2)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 판단
- 3)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 4)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 5)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별 첨>

1.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문서
2. 회사의 회계부정조사 결과보고서
3.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20xx년 x 월 x 일

주식회사 x x x (감사 설치 회사) 감 사 x x x (인)

주식회사 x x x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위원장 x x x (인)



별첨 2 -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 양식 (예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합니다.

2. 본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감사인인 xx회계법인으로부터 20xx년 x월 xx일 당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xx년 x월 xx일 외부전문가 xxxxx을 선임하였습니다.

<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내용 기재 (예시) >

- 1) 회계부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래내역 및 관련 계정과목
- 2) 감사인이 회계부정을 인지하게 된 경위 (감사과정에서 확인,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
- 3)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평가내용

3. 상기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는 20xx년 x월 xx일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되었습니다.

*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 20xx년 x월 xx일 ~ 20xx년 x월 xx일(총 xx일)

본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자에게 상기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20xx년 x월 xx일 요구하였으며, 당사의 시정조치 결과는 20xx년 x월 xx일 제출되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검토 결과, 관련 조사 및 조치는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 요약 기재 (예시) >

- 1)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2)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 판단
- 3)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여부 식별
- 4)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 5)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별첨>

1.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문서
2.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조사 결과보고서
3.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20xx년 x 월 x 일

주식회사 x x x (감사 설치 회사) 감 사 x x x (인)

주식회사 x x x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위원장 x x x (인)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등 일부 개정

- 금융감독원, 2023. 7

◆ 주요 내용

- 1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합니다.
- 3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4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행위를 방지하고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을 변경(특정일 인원수 → 평균 인원수) 하였습니다.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감사인을 4개군으로 분류
-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자산 1천억원 이상 → 5천억원 이상

◆ (시행일) '23. 7. 20. (다만 5의 경우 '23.1.1. 이후 사업연도 시작 회사부터 적용)

I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23.5.2.)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II 주요 개정내용

1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에 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에 대한 감리조치 감경시 신고자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 * ①주도적 역할 등 하지 않을 것, ②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③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외부감사법 시행령§32①1호 각목)
- 이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 현재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단계 감경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정행위 신고자등에 대하여는 감리조치시 검찰고발·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자진공시·개선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합니다.

-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수준을 가중하도록 정하였으나,
 -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임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는 감리조치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조정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가.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관련 기본조치 하향 및 감경사유 추가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조치수준을 1단계 하향(Ⅱ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Ⅲ단계, 지정제외점수 30점)하고,
 - － 지연제출(기재사항 누락·오류 포함)을 3일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누락 금액의 중요도에 따른 조치수준 차등화

- 사업보고서 오류·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 *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Ⅱ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
 - ※ 현재는 사업보고서 오류 또는 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를 부과

다.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양정기준 등 명확화

-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치의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조정

◆ 상위 감사인군(群)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총원행위를 방지하고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을 변경(특정일→평균 인원수)하였습니다.

- 상위 감사인군(群)* 배정을 목적으로 산정기준일에만 일시적으로 품질관리인력을 총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4개군으로 분류
 - － 감사인군 구분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을 산정기준일 시점의 인원수 대신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 4개의 감사인군(가~라)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요건은 가, 나군의 경우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의 140% 이상, 다군의 경우 120% 이상임(라군은 제한없음)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하여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존) 자산 1천억원 이상 → (변경) 자산 5천억원 이상※

※ 다만 ❶사업보고서제출회사, ❷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 1천억원 이상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❶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가 있고, ❷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III 향후 계획

-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23.7.20.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23.1.1.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하여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현행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